

혁신당, 호남서 첫 기초단체장...정치지형 변화 예고

정철원, 담양군수 재선거서 승리
민주 텃밭서 배출...경쟁구도 형성
내년 지방선거 다당구도 전환 촉각
정 군수 "새 길 열겠다" 취임 일성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난 2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뉴스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창당 이후 첫 기초단체장을 탄생시키면서 지역 정치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거대 양당 구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이른바 '다당구도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혁신당 후보가 51.82%(1만2860표)를 획득, 48.17%(1만1956표)를 득표한 이재중 민주당 후보를 904표, 3.65%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혁신당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민주당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다진 데 이어

거둔 성과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직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인사를 총출동시키며 '정권교체'를 내세워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혁신당은 담양에서 나고 자란 '풀뿌리 정치인' 정철원 후보를 앞세워 '대민군조(대통령은 민주당, 군수는 조국혁신당)'를 피력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선 과정 잡음을 시작으로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및 불법 유세차, 농지법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결국 텃밭인 호남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됐다.

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비례 득표율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 전국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면서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다가올 2028년 총선까지 권력 분화 및 다당구도 등 정치지형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군수는 당선 직후 "혁신당은 지난해 곡성·영광 재보선부터 '경쟁이 발전'이라고 주장해왔다. 3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 없이 민주당의 독과점이 유지돼 온 호남 정치가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를 기점으로 진정한 경쟁체제로 전

환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이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의 선명성 경쟁이 더 뚜렷해질 것이고, 이러한 경쟁 구도 형성이 호남 정치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의원 서부터 지자체장,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민주당 일극 체제가 확고한 호남에서 혁신당이 지자체장에 배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당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곡성군수 재선거를 계기로 제기됐던 호남 정치 다극화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4·2재보궐선거가 지방 정치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는 이날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제45대 군수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정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담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선택해 주신 만큼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며 "일평생 담양에서 살아온 경험, 지

역 곳곳에서 민원을 해결한 3선 의원의 노하우를 살려 담양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삶이 있는 담양을 위한 5가지, 오담(五潭) 행복 약속을 드리겠다"며 군정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분야별 정책과제로는 내륙관광 1번지 생태정원 문화도시,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담양,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을 내세웠다.

정 군수는 "민선8기 군수로서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지만 앞으로 군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군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담양의 내일을 일궈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현충탑 참배, 취임식 이후 의회와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했으며, 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김 지사, 정부에 'COP33 유치' 등 현안 건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면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COP33 유치 △기후대응댐 등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을 당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다. 김 지사는 제33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비 상향과 지방하천인 화순 동복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건의했다. 이어 일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생활·경제활동 등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민 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오지현 기자



김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김창범 4·3유족회 회장, 차호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단체 관계자들과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마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전남도-시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발굴

전남도는 4월 한 달간 10개 시군을 찾아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2024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매년 3000억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총사업비 1조4362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사업이 펀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 3000억 원 중 1436억 원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일환으로 목포시 등 5개 시와 설명회를 희망하는 담양군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업부서, 수산부서, 에너지부서, 관광부서, 산단 조성부서 소속 시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첫 설명회는 지난 2일 목포에서 열렸다.

또한 전남도 투자유치와 펀드전담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펀드 선정 및 검토 사업 사례 △전남도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시군별 펀드 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비 12억 지원

광주시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총 152개 단체를 선정해 12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177개 민간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거쳐 152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지원액 및 성과 평가, 단체 역량,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단체를 확정

했다.

선정된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단체별 지원 금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단체 등록한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연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익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강 시장 "제주와 광주,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4·3희생자 추념식서 헌화·분향 추모 유족회와 간담회... '평화연대' 논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이어준 5·18과 4·3이 평화 연대의 길을 함께 걷는다.

김기정 광주시장은 3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광주와 제주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은 덕분에 인권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마움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도, 4·3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희생자인

고 양전종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 생존 희생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전종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정 시장은 "오월광주는 5·18의 손을 잡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늘진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여야 한다"며 "5·18 45주년을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주는 제주와 평화연대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4·3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김원이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중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중자의 배

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 및 생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김 생산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